

내년 총선, 노인친화 정책 경쟁 치열

60세 이상 유권자 30세 이하보다 많아... 통상 노년층 보수정당 지지하나 예단하기 어려워

내년 4월 치러질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사상 처음으로 60세 이상 유권자 수가 30세 이하를 넘어설 전망이다.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변화로, 노년층 표심이 이번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2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올해 10월31일 기준 60세 이상 유권자는 1390만여명으로, 18~39세(1373만여명)보다 17만여 명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율로 보면

4050세대(1660만여 명)가 37.5%로 가장 많고, 이어 6070 세대 31.4%, 2030 세대 31.1% 순이다.

60세 이상 유권자 수가 30세 이하 유권자 수를 앞지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3월 대선에서 30세 이하 유권자는 1424만여명으로, 60세 이상 1312만여명보다 112만여명 많았다.

사상 처음으로 60대 이상 유권자 수가 청년층을 앞지르게 되면서 노년층 표심이 이번 선거 변수로 작용하게 될

전망이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든 유권자일수록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고, 노년층이 청년층보다 투표율이 높다. 노년층 유권자 수가 많아지면 보수 정당이 유리할 것으로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이번에는 보수와 진보 정당 중 어느 쪽에 유리할지는 예단하기가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화 운동을 이끈 86세대(80년대에

대학을 다닌 60년대생)가 60대에 접어들고 있어 이들의 정치적 성향을 보수라고만 단정 짓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총선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노년층 표심을 사기 위한 노인친화적 정책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4050세대 대선 민주당이, 6070세대 이상에선 국민의힘이 우위인 만큼 2030세대 표심이 승부를 결정 짓는 캐스팅보터 역할을 할 것이라 전망도 있다. /뉴스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법안소위 통과 설득 활동.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이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심의·의결됐다. 사진은 21일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회의장 앞에서 김관영 도지사, 정운천 국회의원이 설득 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진=전북도청 제공)

도의회 상임위, 내년 예산안 심사

행자위 “수산물 안정화 관련 기금 조성...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책 마련을”

도 기획조정실 대상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이철)는 22일, 기획조정실 소관 등 2024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김태창 부위원장(군산)은 전북도 재정지출이 작년 대비 1.1%, 재정자립도는 3.9%가량 감소해 광역자치단체 중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인구정책 중 가장 중요한 청년정책과 예산이 대폭 줄었음을 들어 효과적인 인구정책을 발굴할 것을 당부했다.

염영선 의원(정읍)은 전북도 재정상황 및 지방채 발행과 관련, 올해 예

산상황이 녹록지 않고 도의 예산상황도 좋지 않으므로 경제 위기 상황에서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등 지역 경제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정규 의원(임실)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직간접적인 타격을 우려하며, 수산물 안정화와 관련된 기금을 조성해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고, 동부권 특별회계 사업에 대해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성수 의원(고창)은 지방소멸대응 기금으로 관련 사업을 시군에서 각각 수행하고 있지만, 한 해 동안의 사업 시행과 그 성과로 다음 연도 기금과 사업비를 배정하는 시스템이 단기적

인 성과에 치우치는 단점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기금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건의·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도 재정이 넉넉한 상황이 아니므로 출자·출연 기관이 잉여금을 기본재산으로 적립하지 말고 다음연도 사업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점검해달라고 주문했다.

오현숙 의원(정읍)은 순세계 잉여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함께 예산의 성과관리를 위한 연구용역시 실적치가 목표치를 초과하는 경우가 과다하므로 목표치를 하향 설정한 것이 아닌지 검토하고 예산의 성과관리가 제대로 가능할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환복위 “아동복지관련 예산 증액돼야... 신규사업 등 정책 개발을”

도 복지여성보건국 대상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병철)는 22일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 본예산 심사를 실시했다.

먼저, 이병철 위원장(전주)은 폐교 활용 시군립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관련 의회 행정사무감사 대비 도민제안 내용중 폐교활용 시군립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과 관련, 전북도 역시 폐교를 지역 어르신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며 설명을 요구했다.

임승식 부위원장(정읍)은 복지국 전체 예산 중 노인복지 관련 예산은 증액되는 반면 아동복지 관련 지원예산은 감소했다며 전북도의 미래를 위해서는 사회복지·노인복지관련 예산

도 중요하지만 아동복지관련 예산이 증액돼야 한다며 신규사업 등 정책개발을 요청했다.

김만기 의원(고창)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관련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및 예외지원 대상자의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 서비스 이용 기간 등을 질의하며, 지원사업의 기준소득 폐지 등 저출산 상황에 지속되고 있는 전북도의 경우 향후 관련사업 확대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였다.

박용근 의원(장수)은 복지국 예산은 전북도 전체예산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최근 언론보도된 세차녀 모녀 사건과 같은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사회복지사 등 모든 직원이 서류로만 행정을 하지 말고 직접 찾아가는

행정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윤정훈 의원(무주)은 최근 언론보도에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기관들의 실적이 저조하다는 보도 관련 추진 상황 등을 질의하며 마약 중독자들이 건강하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에 대한 적절한 지원과 치료·보호 예산에 대한 적정금액이 산정될수 있도록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황영석 의원(김제)은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생활시설 지원 관련 전년대비 감액부담이 많고 사유가 국민건강보험공단 24년 추정소요액의 하반기 소요분(50%) 추정 분할 편성 예정으로 명시하고 있다며 상반기분만 편성한 사유에 대해 질의했다.

/김재훈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임병찬 전 전주MBC 사장 별세

일생의 절반이상을 언론인으로 살았던 임병찬 전 전주문화방송 사장이 지난 21일 별세했다. 향년 87세.

1936년 진안에서 태어난 고인은 1965년 전주문화방송에 입사하며 언론인의 길을 걸었다. 1966년 6월 진안군 부귀면 곰티재에서 일어난 버스 추락사고와 전 국민을 아파게 했던 1977년 11월 이리역 폭발 사고 등 도내에서 발생한 굵직한 사건들의 현장에 섰다.

언론사의 중역을 거쳐 1989년 여수문화방송 사장, 전주문화방송 사장, 1995년 전북도민일보 사장으로 취임했다. 고인은 1977년 설립된 전북에항분부에 초기부터 참여해 2004년부터 20년 가까이 총재를 맡아 새만금 개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이전 등 국가균형발전의 필요성을 알렸다.

유족은 부인 유정자씨와 아들 임승환·성기·태환씨와 며느리 진소정·주희·안숙희씨 등이 있다. /뉴스



박진만 전북건축사회 회장

전주를 국회의원 출마 선언

박진만 전라북도건축사회 회장(더불어민주당)이 내년 22대 국회의원 전북 전 주을(삼천, 서신, 호자)지역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참좋은정치개혁연대 대표를 맡고 있는 박진만 회장은 22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무식, 무능, 폭정의 여당과 당당히 맞서 전북 미래를 찾아오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밝혔다.

그는 먼저 “윤석열 정권 1년 7개월동안 대한민국은 퇴행과 후퇴의 연속이었다”면서 “검찰독재, 언론탄압, 경성수지 적자, 친인척 비리에 이르는 정권을 견제할 것”이라고 출마의 배경을 전했다.

이어 “전북도 내년 예산이 발행 예정인 채권을 포함해 1.2% 증가에 그쳐 물가 상승률(3.8%)을 고려하면 2.6%가 감소한 셈”이라며 “경남 5.7%, 경북 4.4%의 예산이 반영되는 동안 우리는 언제나 무시, 홀대, 소외의 처우를 겪고있다”고 전북 정치의 현실을 평가했다.

그러면서 “전북 정치는 말을 전하는 활동가가 아닌 투쟁과 실천을 통해 변화와 개혁을 이끄는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도시전문가로서, 전라북도건축사회 회장으로서 주거환경, 구도심의 재탄생, 교통, 안전 등 현장의 민생문제를 힘 있게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전북정치 1번지 전주를 두고 “어린이와 청소년, 어르신이 아무런 걱정 없이 정을 나누고 호미를 통치하던 전주의 옛 명성을 되찾아 ‘퍼펙트 시티’로 만들겠다”며 “건축공학, 도시계획, 부동산, 도시재생, 환경, 교육정책, 의료복지 분야에 이르는 도시공학, 민생공약은 순차적으로 발표할 것”을 시사했다. /뉴스



총선 앞두고 뭉뚱하는 이낙연 전 총리

비명계 ‘구심점’ 될까?

“사법 문제에 당 도덕 감수성 퇴화”... 이재명 체제 직격 “전우 시제 위에 응원가 부를 수 없어”... 공천 학살 경고 비명계, 본격 세력 규합 나서... 이 전 총리도 취지 수긍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전 국무총리·사진)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체제에 대한 쓴소리를 내며 본격적인 뭉뚱기에 나섰다.

당내 혁신계를 지지하는 비명(이재명)계 의원들이 이재명 사당화를 비판하며 ‘원칙과 상식’을 출발점으로 삼아 이 전 대표가 이 대 표 견제에 적극 나서면서 비명계 의 구심점으로 부상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를 향해 “본인의 사법 문제가 민주당을 옥죄고 그 여파로 당 내부의 도덕적 감수성이 퇴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사법적 문제가 다른 것을 가리는 현상이 장기화하고 있다.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대로 가고 있다”며 “굉장히 심각하다고 본다”고 직격했다.

또한 측근들에게는 “전우들의 시제 위에서 응원가를 부를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명계에 대한 공천 학살이 현실화될 경우 총선 지원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이 전 대표가 총선을 앞두고 비명계를 적극 감싸는 발언을 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는 정치 행보로 받아들여진다. 특히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부각하는 가운데 비명계에 대한 공정한 경선 보장을 요구한 셈이어서 총선 과정에서 정치적 역할을 맡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패배 이후 미국으로 출국해 조지워싱턴대

학 한국학연구소에서 방문연구원으로 1년 간 있었다. 지난 6월24일 귀국해 강연 일정을 진행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에 대해 공개적인 비판을 해왔지만 민주당 문제에 대해서는 발언을 자제해왔다.

이 전 대표의 행보가 비명계 의원들이 본격적으로 단체 행동을 나선 시점과 맞물린 점도 예상하지 않는다. 김중민·윤영찬·이원욱·조용천 의원이 주축이 된 ‘원칙과 상식’은 출범과 함께 본격적인 세력 규합에 나섰다.

원칙과 상식에 합류한 친낙(이낙연)계 운영한 의원은 라디오에서 이 전 대표가 결성 취지에 대해 수긍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전 대표가 정치 행보로 비명계 의원을 지원하면서 비명계가 이재명 대표의 대선 후보 경쟁자였던 이 전 대표를 우군으로 삼아 이재명 체제에 혁신과 쇄신 압박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명종으로 구성된 공천관리위원회가 공정한 공천 잣대를 마련하지 않을 경우 집단 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크다.

이 전 대표가 정치 행보로 비명계 의원을 지원하면서 비명계가 이재명 대표의 대선 후보 경쟁자였던 이 전 대표를 우군으로 삼아 이재명 체제에 혁신과 쇄신 압박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명종으로 구성된 공천관리위원회가 공정한 공천 잣대를 마련하지 않을 경우 집단 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크다.

비명계 의원들은 이 전 대표의 향후 행보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다. 이상민 의원은 전날 라디오에서 “오랜 전통의 민주당 역할이 사멸돼 ‘이재명 사당’, ‘개딸당’으로 변질돼 있다”며 “이 전 대표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보다는 행동이 더 필요할 때”라고 했다.

김중민 의원은 “이 전 대표는 이미 정치에서 한발 물러서 있는 분”이라며 “민주당이 완전히 위기 상황에서 SOS를 치지 않는 상황이 아니면 정치적 역할을 위해 같이 뭉 상의하거나 구상하는 것은 저는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

“전액 삭감된 사회서비스원 국비 확보 노력을”

강동화 도의원, 복지여성보건국 예산 심사서

전북도의회 강동화 의원(전주8)은 22일 진행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4년 본예산 심사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운영 예산과 관련하여 정부가 추진해 설립한 출자·출연 기관임에도 국비 지원을 삭감한 정부의 처사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정부는 정책에 따라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여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경상북도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 출자·출연기관으로 사회서비스원이 설립·운영 중에 있다.

전북도 역시 지난 2021년 11월 1일 ‘도민의 행복 미래를 함께 그리는 사회서비스 현장 구축’이라는 미션 아래 전북사회서비스원이 개원하여 운영중이다.

사회서비스원은 지난 2021년 9월 24일 제정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긴급돌봄서비스와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전국에 설립되었고, 시·도지사가 설립하고 정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돼 왔다.

실제 관련 법령 역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도 서비스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도 서비스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사회서비스원 설립 이후 지금까지 국비와 도비를 50:50으로 매칭해 운영비를 지원해 오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전북도가 제출한 2024년 도전라북도 예산(안)에는 사회서비스원 운영 예산 중 국비 지원분이 미연성됨에 따라 이로 인한 국비 감액분을 전북도가 모두 떠안게 됐다.

실제 정부는 지난 9월 ‘2023년 시·도 사회서비스원 표준운영지침’을 개정하며 공공성과 관련된 내용을 제외하는 대신 민간 사회서비스 지원 기능 확대라는 문구를 새로 넣으며 사회서비스원의 공적 역할을 축소하고, 민간에 컨설팅을 제공하는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강동화 의원은 “사회서비스원은 정부 정책에 따라 설립·운영되어 왔고, 관련 법령에도 보조금 및 지원에 대한 지원 대상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명시돼 있다”고 강조하며, “지침변경으로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국비 예산을 전액 삭감한 정부의 일방적인 행태에 대해 전국 16개 시·도가 함께 대응해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김재훈기자